

우리나라 잠재성장률 하락 원인과 경제 역동성 회복 방안

미래전략개발부 경제조사팀
류용욱 선임연구원(yoryu11@kdb.co.kr)
이건무 선임연구원(kmlee@kdb.co.kr)

I. 서론

II. 잠재성장률 하락의 원인 분석

III. 경제 역동성 회복을 위한 과제

IV. 결론 및 시사점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경기 순환적 현상이 아닌 경제의 구조적 성장능력 약화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노동측면에서는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이 가용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제약하고 있으며, 자본측면에서는 주력 산업의 성장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신산업으로의 자본 재배분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높은 수준의 R&D 투자에도 불구하고 혁신성과의 확산이 미흡하고, 저생산성 서비스업과 자원배분의 비효율 등이 경제 전반의 생산성 향상을 제약하고 있다.

잠재성장률의 지속적인 하락은 소득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제약하고 재정 부담을 확대하는 등 경제·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다시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저성장 고착화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단순한 노동·자본의 양적 투입 확대를 넘어 한정된 생산요소의 활용도를 높이고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제고하는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여성·고령층 등 가용 노동력의 활용도를 높이는 한편, 신산업으로의 자본 이동을 촉진하고 AI등을 활용한 주력산업 고도화와 신산업 육성, 서비스업의 고부가가치화 등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충해야 한다. 무엇보다 구조개혁의 성과는 단기간에 나타나기 어려운 만큼 장기적인 안목과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정 계층으로의 비용 부담 집중이나 양극화를 완화하고 혁신의 성과를 폭넓게 공유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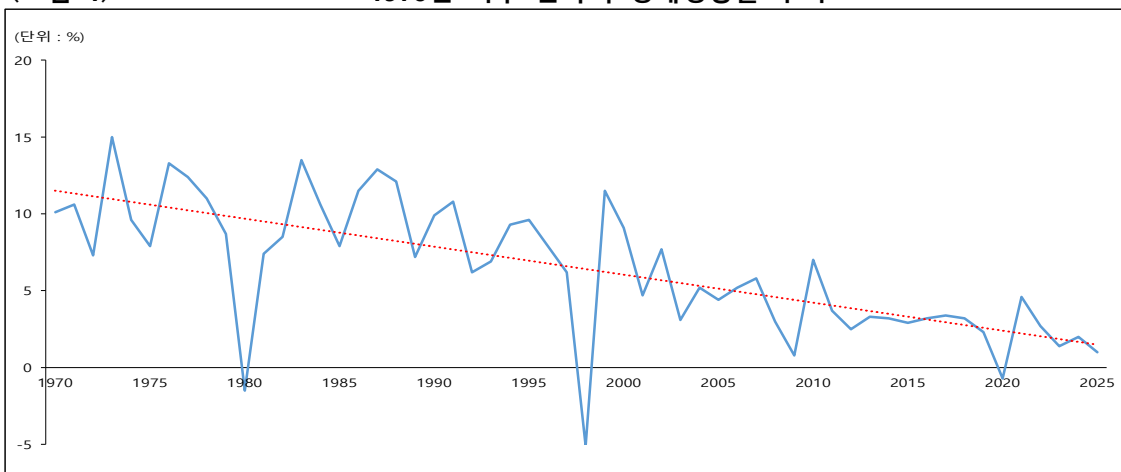
* 본고의 내용은 집필자 견해로 당행의 공식입장이 아님

I. 서론

1. 한국 경제성장률의 장기적인 흐름과 특징

- 전후(戰後) 1990년대까지 한국 경제는 산업화를 통해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였으나, 외환위기 이후 빠른 하락세를 시현
 - (戰後~1970년대) 전후 복구기를 거쳐 정부 주도의 수출지향형 계획경제체제를 통해 고도성장을 이루었으며 중심 산업은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으로 변화
 - (1980년대~1997년 외환위기) 삼저(三低)현상¹⁾과 냉전 종식에 따른 시장 개방으로 장기 호황을 맞았으나 기업부채 및 외환시장 관리 실패로 외환위기 초래
 - (1997년 외환위기~2010년대)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경제와 산업 체질 개선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이후 본격적인 장기 저성장 국면으로 돌입
 - (2020년대) 팬데믹 대응 과정에서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었으며 팬데믹 극복 이후 글로벌 고금리 기조, 미·중 패권 경쟁과 공급망 재편 등 대외 불확실성에 직면하며 저성장 현상 심화

〈그림 1〉 1970년 이후 한국의 경제성장률 추이



자료 : OECD

1) 낮은 국제유가와 저금리, 높은 환율(원화가치 하락)이 맞물려 내수 및 수출이 동반 호황

□ 한국 경제는 단기간에 선진국 수준에 진입하였으나 여타 선진국에 비해 성장률 하락 속도가 빠르다는 특징을 보이며, 이는 저성장 고착화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

○ 한국의 경제규모는 세계 13위('2025년 기준)로 인구 규모를 고려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평가

- 한국 명목 GDP 순위: 28('80년) → 15('90) → 12('00) → 14('10) → 10('20)

○ 다만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여타 선진국에 비해 가파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어 한국 경제에 구조적 문제점이 있음을 시사

- OECD 평균 성장률(% , 년대): 3.0('80) → 2.7('90) → 1.8('00) → 2.2('10) → 1.8('20)

- 미국 평균 성장률(% , 년대): 3.1('80) → 3.2('90) → 1.9('00) → 2.4('10) → 2.4('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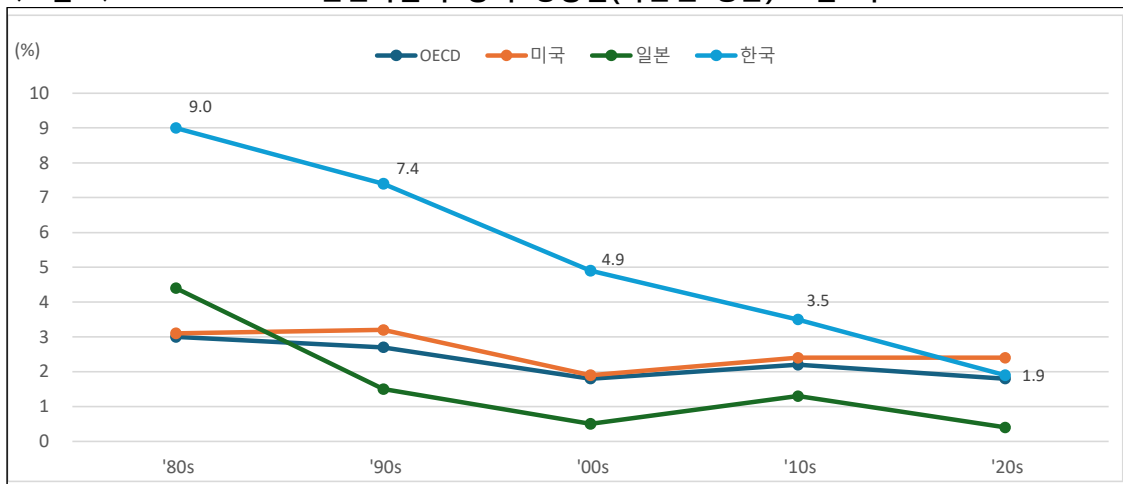
- 일본 평균 성장률(% , 년대): 4.4('80) → 1.5('90) → 0.5('00) → 1.3('10) → 0.4('20)

- 한국 평균 성장률(% , 년대): 9.0('80) → 7.4('90) → 4.9('00) → 3.5('10) → 1.9('20)

○ 한국의 경우 경제위기를 겪을 때마다 성장률이 계단식으로 하락했다는 특징이 있으며, 이것이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²⁾가 우세

- 적절한 정책적 대응이 없다면 저성장이 고착화될 위험이 있음을 의미

<그림 2> 선진국들과 장기 성장률(기간별 평균) 흐름 비교



자료 : OECD

2) 이력효과(Hysteresis Effect): 단기적인 경기 충격(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팬데믹 위기)이 끝난 후에도 위기 이전 성장률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낮은 수준에서 새로운 균형수준(잠재성장률)이 형성되는 현상

2. 잠재성장률 산출 방법과 한국의 잠재성장률 하락 요인

□ 잠재성장률은 국가 경제가 보유한 생산요소를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활용하여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의 경제성장률을 의미

- 경제의 '단기적 경기 변동'을 제거한 '중장기적 기초 체력'을 나타내며, 미래 성장을 예측하고 국가의 경제 활력을 평가하는 핵심적인 거시경제 지표로 활용
- 실제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상회하는 경우 경기 과열과 인플레이션 압력이 확대될 수 있어 긴축정책이 고려되며, 반대로 하회하는 경우 경기 부진과 유흥생산능력의 발생을 의미하므로 경기대응적 확장정책이 고려
- 잠재성장률 자체가 하락하는 상황에서는 단기적인 재정 확대나 금리 인하를 통해 경제 활력을 회복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
 - 잠재성장률의 하락 국면에서는 경기회복을 위한 정책이 물가상승 압력만 자극할 뿐, 실제 경제 부양 효과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성장과 물가 간 정책적 딜레마 심화

□ 잠재성장률은 직접 측정이 불가능해 추정과 변화 원인 분석을 위해 성장회계 활용

- 성장회계란, 국가의 경제 성장률을 노동, 자본, 총요소생산성의 세 요인으로 분해하여 각 요인이 성장에 기여한 정도를 측정, 분석하는 방법론
- 일반적으로 콥-더글러스 생산함수³⁾를 가정하여 노동과 자본 투입의 성장 기여도를 산출하고, 실제 산출 증가분 가운데 노동과 자본의 투입으로 설명되지 않는 잔여분(residual)을 총요소생산성으로 정의

3) 생산에 투입되는 생산요소(노동과 자본)와 이를 통해 얻어지는 총생산량(GDP)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함수이며 아래와 같이 나타냄

$$Y=A \cdot L^{\alpha} \cdot K^{\beta}$$

L: 노동투입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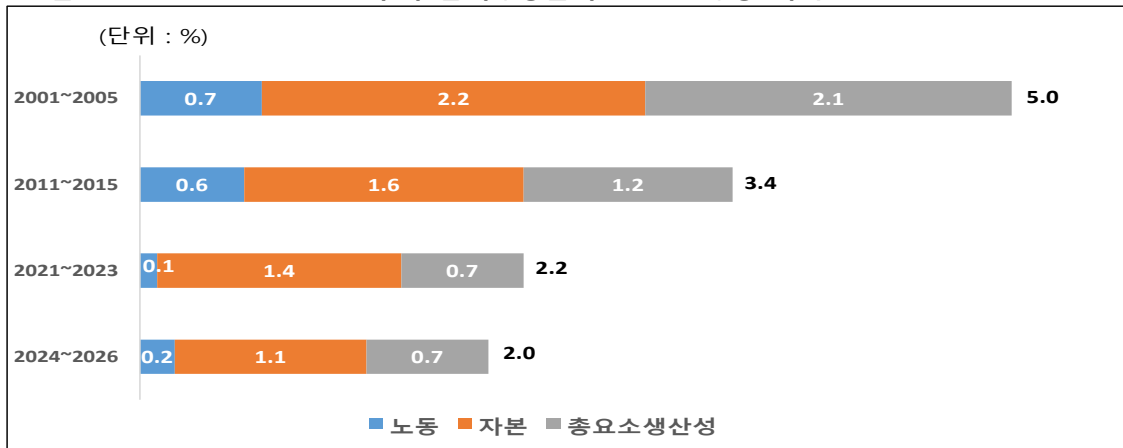
K: 자본투입량

A: 총요소생산성(기술수준, 제도, 혁신 등)

α, β : 노동과 자본의 생산자승 탄력성($0 < \alpha, \beta < 1$)

- 총요소생산성은 노동과 자본의 양적 투입으로 설명되지 않는 생산 증가분으로, 기술진보, 경영혁신, 자원배분의 효율성 등 다양한 요인을 포괄적으로 반영
- 한국의 경우 비교적 단기간에 잠재성장률이 빠르게 하락했으며 성장회계분석에 따르면 모든 요소가 하락
 - 특히 노동투입과 총요소생산성의 기여도가 자본투입의 기여도에 비해 확연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대한 원인 분석을 통해 한국 잠재성장률 하락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그림 3〉 우리 잠재성장률의 요소별 성장 기여도



자료 : 한국은행(2024),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과 향후 전망" 자료 바탕으로 당행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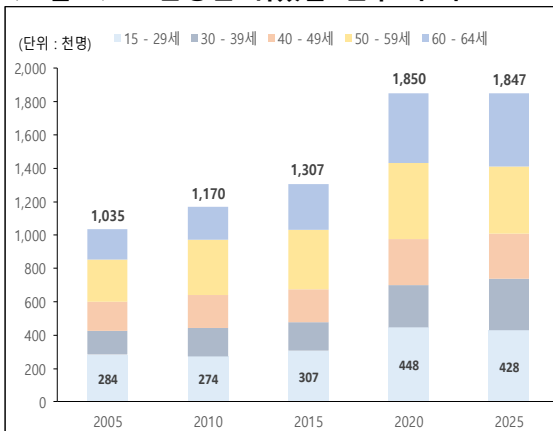
3. 잠재성장률 하락이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

- (사회·고용 측면) 잠재성장률 하락은 노동시장과 인구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변화가 다시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는 악순환을 형성
 - 고용시장 위축으로 청년의 구직기간이 길어지면서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혼인·출산이 지연되며, 저출산과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다시 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을 훼손하는 악순환이 지속될 위험이 상존
 - 또한 취업을 포기하고 구직시장에서 이탈하는 '쉬었음' 인구가 증가하면서 노동력의 활용도가 저하되고, 장기적으로 숙련된 인적자본의 축적과 노동공급 기반이 약화

□ (재정 측면) 잠재성장률 하락은 세원(稅源)의 부실화를 의미하며 이는 국가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위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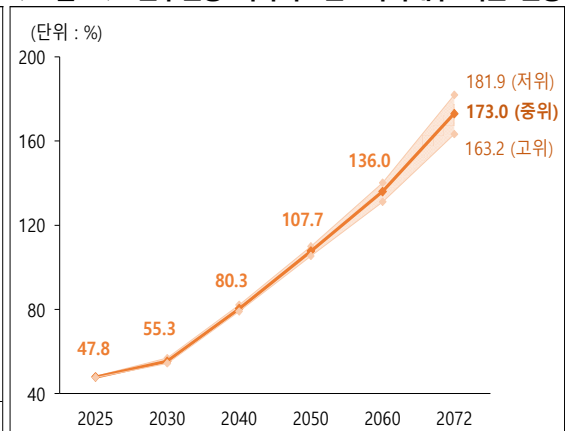
- 잠재성장률 하락은 정부의 주요 세원인 기업이익과 가계소득의 성장세 둔화로 이어지며 법인세·소득세 등 주요 국세의 세입 기반을 약화시킴으로써 시간이 경과할수록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
- 한편, 고령화에 따른 의무지출 확대로 재정의 경직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의 재량적 재정운용 여력은 제약될 전망
 - 국회예산정책처는 현재 상황이 유지되는 경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2025년 47.8%에서 2072년 173.0%까지 상승할 것으로 추산

<그림 4> 연령별 쉬었음 인구 추이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5> 인구전망 시나리오별 국가채무 비율 전망



자료 : 국회 예산정책처

□ (산업 측면) 민간의 투자 유인을 위축시키고 정부의 투자지원 여력을 감소시켜 장기적으로 국가 산업 발전 동력이 약화

- 기업은 미래 수익성에 대한 기대 약화로 투자를 축소하고, 이는 자본축적과 생산성 향상을 제약하여 잠재성장률을 더욱 낮추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
- 한편, 저성장에 따른 세입기반 약화와 고령화에 따른 의무지출 확대는 산업 지원을 위한 정부의 정책 대응 여력을 제약하는 요인

II. 잠재성장률 하락의 원인 분석

1. 노동 투입 둔화

□ 저출산 기조와 기대수명 연장으로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 중

-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이 OECD 최저수준에 머무르는 가운데 기대수명 연장과 베이비붐 세대⁴⁾의 고령층 진입이 맞물리며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
 - 2023년 0.72명으로 최저치를 갱신한 합계출산율⁵⁾은 2025년 0.8명으로 반등하였으나, OECD 회원국 평균인 1.46명과 대체출산율⁶⁾ 2.1명을 크게 하회하는 수준
 - OECD 합계출산률(명): 1.8('00년) → 1.8('05) → 1.8('10) → 1.7('15) → 1.6('20)
 - 한국 합계출산률(명): 1.4('00년) → 1.3('05) → 1.4('10) → 1.2('15) → 0.8('20)
 - 한편, 2000년 76세 수준이었던 기대수명은 완만히 상승하여 2026년 84.7세를 기록하였으며, 2062년에는 90세에 이를 것으로 추산
 - 한국 기대수명(세): 76('00년) → 83.5('20) → 87.2('40) → 89.8('60)

□ 이에 따라 노동공급의 근간인 생산연령인구는 2019년 이후 감소세로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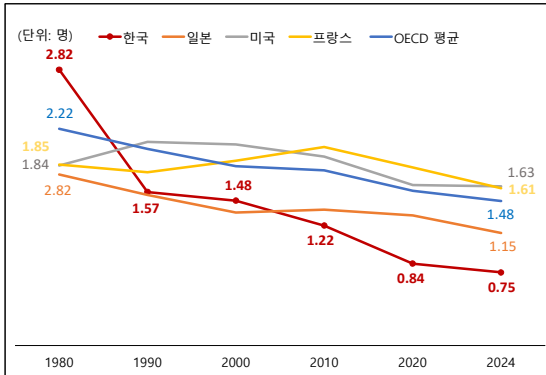
- 경제 내 15-64세 인구로 정의되는 생산연령인구는 2019년 3,703만명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전환하였으며, 이후로도 감소 추세가 지속될 전망
 - 통계청 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 생산연령인구는 2072년 1,658만명으로, 2025년의 3,591만명 대비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
 - 한국 생산연령인구(백만명): 37.4('20년) → 34.2('30) → 29.0('40) → 24.4('50)
- 노동공급의 핵심 기반인 생산연령인구의 감소는 자본이나 기술 혁신으로 대체하기 어려운 '절대적 노동시간'의 감소를 초래하여 잠재성장률 하락 요인으로 작용

4) 6.25 한국전쟁 이후 출산율이 급격히 높아진 1955~1963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

5) 한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동안 현재의 연령별 출산율이 계속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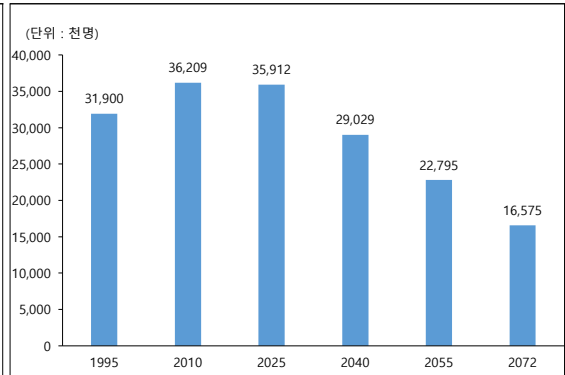
6) 한 세대의 인구 규모가 다음 세대에서 대체되기 위해 필요한 여성 1명당 평균 출생아 수

〈그림 6〉 주요국 합계출산율 추이



자료 : OECD

〈그림 7〉 생산연령인구 추이



자료 : 국가데이터처 「장래인구추계」

□ 한편,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점의 영향으로 생산연령인구의 효율적인 활용도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

○ 노동시장의 이중구조⁷⁾ 심화 추세 속에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이 지연되는 한편, '구직 포기' 현상도 심화

- 노동시장 간 이동성이 제약됨에 따라 청년층은 2차 시장⁸⁾ 진입보다는 양질의 일자리를 기다리는 경향을 보이며, 이 과정에서 노동시장 진입이 지연되고 일부는 구직을 단념하여 노동시장을 이탈
 - 첫 취업 소요기간 1년 이상 청년 비중(%): 23.2('05년) → 26.4('15) → 31.3('25)
- 청년층의 구직기간 장기화는 숙련 기회의 상실로 인적자본 축적을 저해하며, 생애 전체적으로도 고용 안정성을 저해하고 소득을 감소시키는 부정적 영향을 초래⁹⁾

○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 참여는 주요국에 비해 여전히 미흡한 수준

-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는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여성 고용률은 2025년 63.0%로 여전히 OECD 평균을 하회
 - OECD 여성고용률(%): 56.3('10년) → 58.4('15) → 58.8('20) → 63.8('25)
 - 한국 여성고용률(%): 52.7('10년) → 55.7('15) → 56.7('20) → 63.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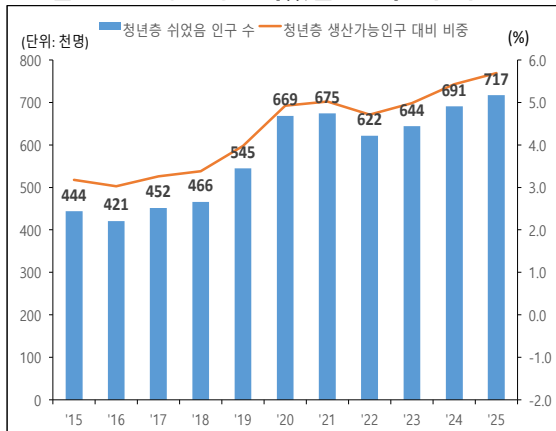
7) 노동시장이 대기업·정규직 중심의 노동시장과 중소기업·비정규직 중심의 노동시장으로 분절되고, 양 부문간 임금·고용안정성의 격차와 이동 제약이 지속되는 현상

8) 비정규직·임시직 등 고용이 불안정하고 임금·복지 등이 상대적으로 낮은 일자리들로 구성된 노동 시장

9) 이재호(2026), 청년세대 노동시장 진입 지연과 주거비 부담의 생애영향 평가, BOK 이슈노트 제2026-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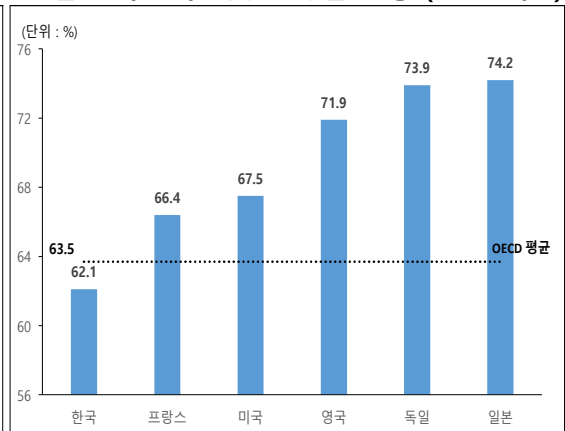
- 고령층의 경제활동참여는 OECD 최고 수준이나, 조기퇴직 이후 생계형 자영업과 저생산성 일자리로의 재취업이 많아 숙련인력의 활용도는 미미
- 우리나라 65세 이상 근로자 고용률은 39.5%로 OECD 1위를 기록하고 있으나, 단순노무직 비중이 35.4%, 비정규직 비중이 61.2%로 고용의 질은 열악한 실정
- OECD 노인고용률(%): 11.0('10년) → 11.5('15) → 11.9('20) → 14.1('25)
- 한국 노인고용률(%): 29.0('10년) → 30.4('15) → 34.1('20) → 39.5('25)

〈그림 8〉 청년층 '쉬었음' 인구 추이



자료 :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9〉주요국 여성 고용률 현황 ('24년 기준)



자료 : OECD

2. 자본축적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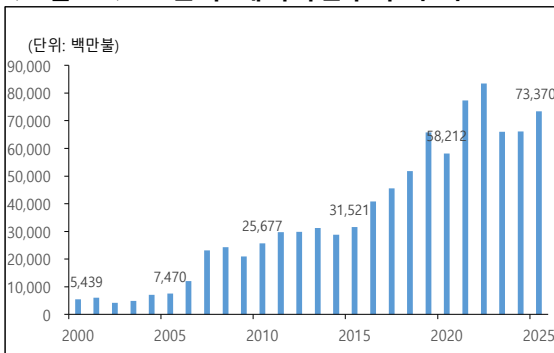
- 경제발전에 따라 자본의 한계생산성이 하락하며 자본 축적이 둔화되는 것은 경제가 성숙단계에 진입하면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

- 자본 축적이 진행될수록 자본의 한계생산성이 체감하여 추가적인 자본투입의 성장기여도는 축소
- 이에 따라 추가 투자의 기대수익이 감소하면서 기업의 투자유인이 약화되고 자본축적 속도도 점차 둔화
- 실증적으로도, 경제 구조와 제도적 여건이 유사한 국가 및 지역간 분석에서 1인당 GDP의 수준과 경제성장률 간 유의미한 음의 관계 확인

□ 최근의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로 해외직접투자와 자본유출이 확대되는 추세이며,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도 증대되며 국내 기업투자는 위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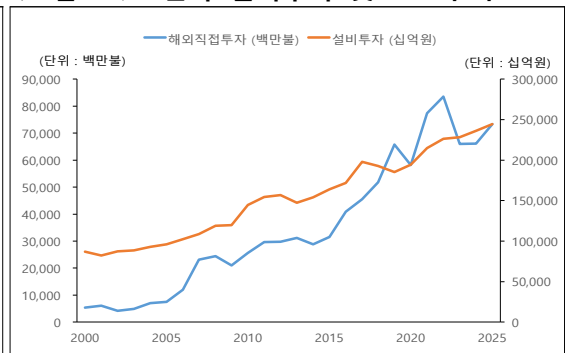
- 한국의 해외직접투자(FDI)는 절대적·상대적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시현
 - 한국의 FDI는 2025년 현재 734억달러로 2005년 74.7억달러에서 9.8배 증가
 - FDI(억달러) 74.7('05년) → 256.8('10) → 315.2('15) → 582.1('20) → 719.2('25)
 - 한국의 설비투자 대비 FDI는 '2005년 7%에서 '2025년 38%로 지속적인 증가세 시현
 - 우리 기업들의 해외투자는 늘어나는 반면 국내 투자는 둔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자본축적이 우리 경제성장률에 기여하는 비중이 감소

〈그림 10〉 한국 해외직접투자 추이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그림 11〉 한국 설비투자 및 FDI 추이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은행

- 과거 해외직접투자의 주요 동인이 비용절감과 시장 확대였다면, 최근에는 공급망 안정과 무역장벽 회피 등 경제안보 요소가 핵심 동인으로 부상
 - 미국의 CHIPS법¹⁰⁾ IRA법¹¹⁾, EU의 반도체법¹²⁾ 등 한국 주요 수출국의 산업지원 정책 확대로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결정에서 경제안보와 공급망 안정 중요성 확대
 - FDI 증가는 해외자산 증가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국내 투자를 대체할 경우 국내의 생산기반과 고용이 위축되는 '산업공동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견해 제기

10) CHIPS Act: 미국의 반도체 생산능력과 R&D를 강화하고 공급망의 대외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미국내 반도체 제조시설 건설 등에 보조금, 대출, 보증 등을 제공하는 법안
 11) Inflation Reduction Act: 미국내 청정에너지·전기차·배터리·핵심광물 등의 미국 내 생산과 투자를 세액공제와 보조금 으로 유도해 친환경 산업과 공급망을 육성하는 산업정책
 12) 반도체법: 2030년까지 반도체 시장에서 EU의 점유율을 20%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유럽의 반도체 생산·R&D·설계 역량을 강화하고 제3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정책

- 한편,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에 따른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 증가는 그 자체로 기업의 투자 의사결정을 축소·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Dixit의 실물옵션모형¹³⁾에 따르면, 투자는 비가역적 의사결정으로 불확실성 확대시 ‘투자 지연’의 가치가 증가하여 기업의 투자 유인은 축소

□ **주력 산업이 성숙단계에 진입한 가운데 산업구조의 전환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도 자본축적 둔화의 요인**

- 한국경제는 산업구조 변화속도가 빠르게 둔화되는 등 산업역동성이 저하되고 있으며, OECD 국가와 비교해도 낮은 수준으로 평가
 - Lilien Indicator¹⁴⁾로 측정한 한국의 산업구조 변화 속도는 OECD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이며, 그 하락 속도 또한 매우 빠른 편¹⁵⁾
 - OECD 내 한국 순위: 10('91~03년) → 29('04~'08) → 29('09~'13) → 30('14~'18)
 - 동 연구는 산업구조 변화속도와 실질성장률의 추세치 간에 양(+)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여 산업 역동성 저하가 중장기 성장잠재력 악화의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 시사
- 주력산업의 성숙화로 투자여력이 약화된 반면, 신산업으로의 자본 재배분은 미진하여 자본축적이 둔화되었을 가능성
 - 철강·석유화학 등 기존 주력산업은 공급과잉과 수익성 저하로 신규 설비투자 여력이 약화된 한편, 신규 투자는 반도체 등 일부 산업에 편중
 - 이에 따라 기존 산업에서 축소된 자본이 생산성이 높은 신산업으로 원활히 재배분되지 못하면서 산업구조 전환과 자본 축적이 지연

13)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기업이 투자·철수·연기 등의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는지를 옵션 관점에서 분석하는 모형

14) 산업간 노동력 재배분과 구조의 변화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각 산업 부문별 고용 증가율의 가중편차를 통해 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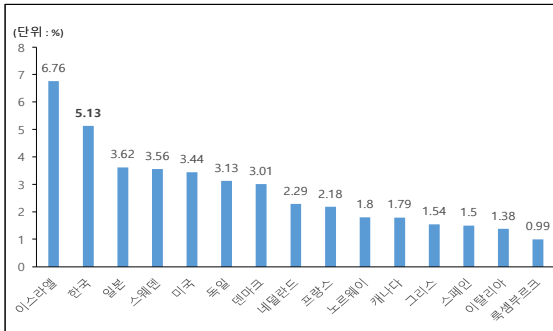
15) 이태규(2020), “한국경제의 역동성 진단: 산업구조변화와 성장의 국제비교”, 한국경제연구원

3. 총요소생산성(TFP) 둔화

□ R&D 투자의 양적 성장은 양호하나 기술사업화와 생산성 향상 등 실질적인 성과로의 전환은 상대적으로 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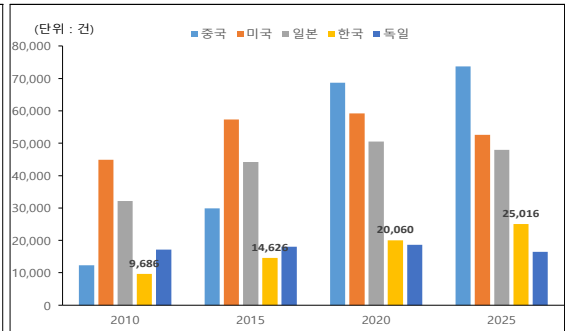
- 한국의 R&D 투자 규모는 OECD 최고 수준이나, 이러한 투자의 양적 확대가 경제 전반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과정에는 여러 구조적 제약이 존재
 - 한국 GDP 대비 R&D 투자비중은 OECD 회원국 중 이스라엘에 이어 2위 수준
 - 한국 R&D/GDP(%): 2.1('00년) → 2.4('05) → 3.2('10) → 3.8('15) → 4.5('20)
 - 한국 R&D/GDP 순위: 3('10년) → 2('15) → 2('20) → 2('24)
 - 한국의 국제특허출원건수 또한 1998년부터 27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4년 23,851건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중국, 미국, 일본에 이은 세계 4위 수준

〈그림 12〉 국가별 GDP 대비 R&D 투자비중



자료 : OECD

〈그림 13〉 국가별 국제특허출원건수



자료 : 세계지적재산권기구

- 우리나라의 정부부문 R&D는 장기적, 도전적 연구를 촉진하는 제도적 기반이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¹⁶⁾
 - (평가·관리체계) 단기적 성과 중심의 평가·관리체계가 유지되며 선행 사례가 부족한 분야에서는 장기적·혁신적 연구목표 설정에 소극적인 경향
 - (정부정책) 정책기조가 빈번하게 변화함에 따라 장기적인 관점의 연구개발 투자보다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연구과제에 자원이 집중
- 단기성과 중심의 R&D 관행으로 공공연구기관 과제 성공률은 90%에 달하나 사업화 실적은 미흡하며 신산업 창출과 성장동력 제고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¹⁷⁾

16) 최민철(2024) “혁신정책 전문가 50인에게 묻다: 우리나라 연구개발 정책이 나아갈 방향”, 한국산업연구원

- 한편, 민간부문 R&D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혁신성장과 중소기업과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속도는 더딘 실정
 - OECD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국내 기업 R&D의 약 47%를 10대 대기업이 수행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생산성은 대기업의 약 26%에 불과
 - 중소기업의 기술흡수역량(absorptive capacity)이 저하¹⁸⁾되고 있으며, 대기업의 혁신이 중소기업으로 확산되는 기술확산이 미흡한 점을 구조적 문제로 지적

□ 규제와 인력수급 등 구조적 요인으로 혁신기업의 스케일업 제약

- 경제 내 고성장기업의 비중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초기 혁신기업이 중견기업 이상으로 성장(Scale-up)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시사
 - 경제 내 고성장기업 수의 비율은 2009년 12% 수준에서 2022년 8% 수준으로 하락하였으며, 매출액 비중은 같은 기간 22%에서 13%로 하락¹⁹⁾
- 비탄력적인 규제체제·고용시장, 해외진출 인프라 부족 등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혁신기업의 시장 진입 및 스케일업 여건은 여전히 부족
 - 포지티브 규제체제, 기존 산업과의 이해관계로 모빌리티, 원격의료, 핀테크 등 신산업의 사업화 및 시장 진입 지연
 - 핵심인력 확보의 어려움 역시 성장과 사업 확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
 - 전문 인력의 부족, 사업 초기 열악한 임금 및 근로환경 등으로 조사대상 기업의 61.6%가 신규인력 채용 과정에서 어려움을 경험²⁰⁾
 - 해외시장 진출은 혁신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스케일업의 핵심 경로이나, 해외시장 정보와 네트워크, 국제 경험 부족 등으로 대부분의 스타트업이 글로벌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지적
 - 2019년 기준 우리 신생기업 중 해외 진출 기업은 2.2%에 불과하며, 유럽의 20% 수준과 대비²¹⁾

17) 이도형 외(2020), “미션 중심 도전적 R&D 프로그램 기획 연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8) 소기업의 빅데이터 분석 활용률은 3.0%에 불과하며, 대기업과의 활용률 격차(30.7%) 또한 OECD 평균(22.5%p)을 크게 상회

19) 김민호 외(2024), “혁신기업의 육성과 스케일업: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전략”, KDI

20) 이상무 외(2023),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과 규제환경에 대한 연구”, KDI

21) OECD(2023), “OECD Reviews of Innovation Policy:Korea 2023”

□ 경제 내 생산성이 낮은 부문이 생산요소를 상당 부분 점유하며 경제 전반의 자원배분 효율성 제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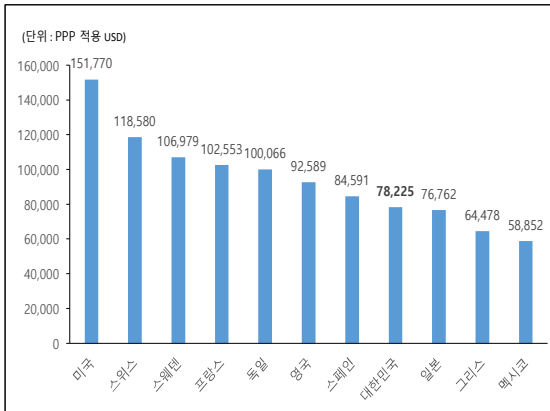
○ 생산성이 낮은 서비스업이 고용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며 경제 전반의 생산성 둔화 요인으로 작용

- 2023년 기준 한국 서비스업의 취업자당 노동생산성은 제조업 대비 약 49.4%로, 미국(101%)와 영국(80%)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²²⁾
- 반면, 서비스업이 창출하는 고용은 2024년 전체 취업자의 약 56%로 생산성이 낮은 서비스업 비중이 높아 경제 전반의 노동생산성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지적

○ 한계기업²³⁾ 비중이 높아지며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가 생산성이 높은 부문으로의 이동이 제약되는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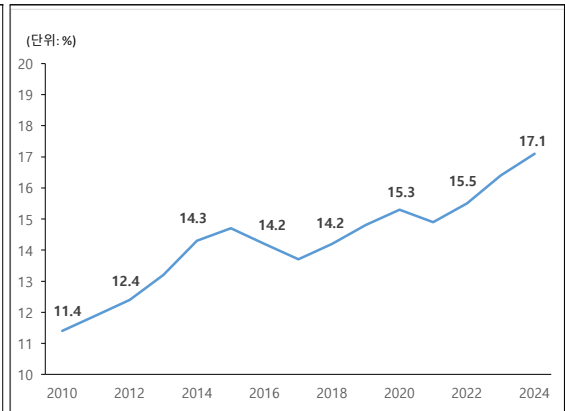
- 2024년 전체 외감 기업 중 한계기업 비중은 17.1%로,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0년 이후 최고수준
- 한계기업 비중(%): 11.4('10년) → 14.7('15) → 15.3('20) → 17.1('24)
- 한계기업은 생산요소를 점유하여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하고, 노동시장과 상품시장의 가격신호를 왜곡하여 생산성이 높은 기업의 성장 또한 제약

〈그림 14〉 주요국 평균 노동생산성



자료 : 한국생산성본부(2025), 「노동생산성 국제비교」

〈그림 15〉 한계기업 비중 추이



자료 : 한국은행

22) 한국생산성본부(2025), 「노동생산성 국제비교」

23)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지속적으로 (3년이상) 감당할 수 없어 정상적인 영업으로 생존하기 힘든 기업

Ⅲ. 경제 역동성 회복을 위한 과제

1. 노동공급 확충 및 노동시장 구조개선

□ 여성 및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와 외국인력의 전략적 유치를 통한 노동공급 기반 확충

- 여성 및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을 통해 국내 고용시장의 효율성 제고
 - 정부지원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일·가정 양립제도 활용을 확대하는 한편, 직업훈련과 재취업 지원 강화로 경력단절 여성의 노동시장 복귀를 촉진할 필요
 - 우리나라 여성의 가장 큰 노동 참여 제약요인은 출산·육아에 따른 돌봄 부담과 경력 단절인 것으로 분석
 - 임금체계의 개편과 연계한 계속고용제도의 사회적 합의 도출이 시급하며, 생애 전반의 직업훈련과 재취업 지원을 통해 고령자의 고용가능성을 높일 필요
 - 기대수명 증가와 건강수준 개선에도 불구하고, 현행 연공형 임금체계²⁴⁾와 정년제도는 고령층의 지속적인 노동시장 참여를 제약
- 외국인력의 전략적 유치를 통해 국내 노동공급 감소를 보완
 - 2024~2028년 누적 약 300만명의 인력 순부족이 예상되는 만큼²⁵⁾ 단기적인 노동공급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력의 적극적인 활용
 - 중장기적으로는 숙련·전문인력의 전략적 유치와 국내 정착을 촉진하여 인적자본 기반을 확충
 - 우리나라로 유입된 숙련 외국인 중 5년 이상 체류하는 비중은 절반에 그치는 등,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매력적인 정착지로 평가받지 못하는 상황²⁶⁾
 - 고숙련 외국인력의 비자·취업 요건 개선, 국내 유학생의 취업 연계와 숙련도에 따른 체류자격 전환 등을 통한 우수 외국인력의 유입경로를 확대
 - 주거와 언어, 교육과 취업 등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우수 외국인력의 장기 체류를 유도

24) OECD는 현행 연공급 체계가 임금과 생산성 간 괴리를 확대하여 고령자의 계속고용을 저해하는 것으로 분석, 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24

25) 이규용 외(2024), 산업 및 직종별 인력수급전망과 외국인력 수요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6) OECD(2024), 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24

□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점 해소를 통한 노동시장 효율성 및 생산성 제고

-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기업 간 생산성 및 임금 지급 능력 격차에서 비롯되는 구조적 문제로, 노동정책과 기업경쟁력 제고를 병행한 접근이 필요
 - 기업의 낮은 생산성과 임금 지급 능력이 우수 인력 확보와 자본투자를 제약하고 생산성 개선을 어렵게 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져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고착화
- 중소기업의 생산성 및 임금지급능력을 제고하여 양질의 인력 유입 기반을 강화
 - 산·학·연 협력과 대·중소기업 간 기술협력을 활성화하고 기술사업화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
 - 정책금융과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고 디지털 전환 및 생산설비 고도화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촉진
 -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및 공정한 거래환경 확립을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과 경영여건 개선 지원
 - 산업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재직자 직무훈련을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핵심인력 확보와 생산성 향상을 뒷받침
 - 훈련의 실효성 제고, 교육훈련 휴가나 훈련 기간 중 대체인력의 임금 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이 훈련에 부담해야 하는 비용과 인력부담을 경감²⁷⁾

2. 자본투자 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

□ 전략적 자본공급과 위험분담을 통한 신성장산업 민간투자 촉진

- 신성장산업은 대규모·장기 자금을 필요로 하는 반면, 기술 및 시장 불확실성이 높아 민간 자본으로는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의 투자가 어려운 특성 내재
 - 장기적인 안목으로 높은 불확실성을 감내하는 '인내자본'의 공급이 요구되며, 이 과정에서 민간이 부담하는 투자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이 중요
-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고 있으며, 주요국 또한 비슷한 방식으로 민간자본을 유인하고 혁신기업에 장기 성장자금을 공급

27) OECD(2020), Enhancing Training Opportunities in SMEs in Korea

〈표 1〉

주요국 정책펀드 개요

국가	정책수단	내용
한국	국민성장펀드	정부 출자를 마중물로 첨단전략산업에 장기 성장자금을 공급하고 민간투자를 유도
미국	Small Business Investment Company (SBC)	정부가 민간 VC에 레버리지 자금을 제공하여 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확대
영국	British Patient Capital (BPC)	딥테크·AI 등 자국 혁신 고성장기업에 장기인내자본 (Patient Capital)을 공급하고 민간 VC와 공동투자
독일	German Future Fund (GFF)	공공자금을 활용한 VC·성장펀드 출자 및 민간 공동투자를 통해 성장단계 혁신 기업에 대규모 장기 성장자금 공급

- 일부 국가는 국부펀드를 활용하여 국가자산을 미래 전략산업에 장기 투자하고, 투자성과를 국민과 공유하며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확충
 - 대표적으로 UAE의 무바달라(Mubadala) 투자공사는 석유자원 개발로 축적한 국가자산을 AI,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전략산업에 장기투자하며 경제 다각화 추진

〈참고 1〉

무바달라 투자공사 (Mubadala Investment Company) 개요²⁸⁾

- (설립 배경) UAE의 국부펀드로서, 석유 의존 경제구조를 탈피하고 산업 다각화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2017년²⁹⁾ 설립
- (운용 규모) 운용자산은 3,850억달러이며, 2024년 약 292억 달러를 투자하여 전 세계 국부펀드 투자 금액의 약 20%를 집행하는 등 글로벌 전략투자 주도
- (거버넌스) 정부가 이사회 구성 등 주요 의사결정 체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나, 개별 투자에 대해서는 전문 경영진과 투자위원회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절충형 지배구조
- (투자 전략 및 특징)
 - 정부 소유의 구조에도 철저한 상업적 원칙에 따라 운용
 - 반도체, 재생에너지, 헬스케어 등 국가 전략산업 내 핵심기업(챔피언)을 육성하여 산업 다각화와 고용 창출 촉진
 - 2025년 기준 아부다비 비석유 GDP의 5.7%를 차지, 2021년 이후 약 9만 8천개의 직간접 일자리 창출

28) 대한상의 (2026), '주요국 국부펀드 현황 및 시사점' 참고

- 우리 정부도 성장산업에 인내자본을 공급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KIC 내 전략투자계정을 활용한 '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 도입을 계획 중
 - 전략산업에 대한 장기 인내자본을 공급하는 한편, 앵커투자자³⁰⁾로서 국내외 민간자본의 유입을 촉진하여 대규모 투자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전망
 - 아울러 대외 충격 발생시에는 외환 및 자산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수행하여 경제안보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3. 총요소생산성(TFP) 극대화를 위한 구조 개혁

□ 장기적인 관점에서 저성장 탈피의 핵심은 총요소생산성(TFP)의 제고

- 노동과 자본 등 생산요소의 투입 확대는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주요 수단이나, 한계생산 체감³¹⁾으로 인해 투입량이 늘어날수록 추가적인 성장효과는 감소
- 특히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자본축적 둔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단순히 요소투입 확대만으로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데 한계에 봉착할 수 있으며, 이는 한국 뿐 아니라 여러 선진국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현상
- 따라서 기술혁신과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자원의 질을 높여 동일한 노동과 자본으로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구조개혁이 필요

□ 산업수요와 국가전략에 기반한 R&D 투자체계를 구축하고, 연구성과가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촉진

- (정부) 부처 간 분절화를 완화하고 중장기 국가전략에 기반한 R&D 추진체계 구축
 - 범부처 공동기획을 확대하는 한편, 중장기 로드맵에 기반한 투자 원칙을 확립하여 부처별 사업의 분절성을 완화하고 R&D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 제고

29) 무바달라 개발회사와 국제 석유투자회사 (IPIC)의 합병으로 설립

30) 펀드 등의 초기 단계에 선도적으로 자금을 투입하여 투자위험을 분담하고 후속투자를 유도하는 투자자

31) 다른 생산요소의 투입이 일정할 때, 생산요소의 투입량이 증가함에 따라 추가적인 요소 투입이 가져오는 생산량의 증가분은 점차 감소하는 현상

- (기업·산업계) 연구개발의 기획 단계부터 참여하는 산학연 공동기획을 확대하여 기업의 기술수요와 산업현장의 생산성 과제를 연구개발에 적극 반영
- (연구기관) 대학을 비롯한 계층별 연구기관의 연구성과가 스타트업,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기술 이전·사업화 지원을 확대

□ 경제 내 가용자원의 효율적 재배분을 통한 생산성 제고

- (한계기업 구조조정 및 산업 재편) 회생 가능한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을 지원하고, 부실기업의 신속한 구조조정을 통해 노동·자본이 생산성 높은 기업과 산업으로 이동하도록 유도
- (교육·노동시장 간 미스매치 해소) 교육시장의 효율화를 제고하는 한편 실무에 적합한 대학교육 시스템 마련
 - 우리나라는 근로자 약 50%가 전공과 무관한 분야에 종사하는 등 교육과 노동시장 간 미스매치가 높은 수준³²⁾
 - 또한 과도한 학력주의가 교육인플레이션을 초래하여,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보다 학위 취득 자체가 경쟁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향
 - 산업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개편, 산학협력 확대, 직업교육 및 재교육 강화 등을 통해 교육체계를 노동시장 수요에 부합하도록 개선할 필요

□ 저부가가치 서비스업의 생산성 제고 및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육성

- 서비스업은 크게 생활밀착형 저부가가치 서비스업과 전문·지식기반의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으로 구분되며, 우리나라의 경우 저부가가치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다는 점이 경제 전반의 생산성 제약 요인으로 작용
 -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약 60%가 저부가가치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영세사업체 중심으로 규모의 경제와 혁신투자가 제약³³⁾

32) OECD(2026), 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26

33) 정선영 외(2025),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 평가 및 정책적 대응방향”, 한국은행

- 이는 영세 자영업자의 과잉 진입과 폐업·재창업이 반복되는 ‘회전문식 경쟁’³⁴⁾ 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기업 규모의 확대와 생산성 향상 여지는 제약
- 디지털 전환과 협업·규모화를 통해 기존 영세사업체의 생산성을 높이는 한편, 경쟁력이 낮은 사업자의 폐업 및 사업전환을 지원할 필요
- 장기적으로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등 노후소득기반을 확충하고 고령층의 재취업 및 계속고용 여건을 개선하여 은퇴 이후 생계유지를 위한 비자발적 자영업 진입을 완화할 필요

□ AI 및 피지컬 AI에 기반한 주력산업 고도화 및 산업구조 혁신

- 인공지능과 이를 로봇 등 물리적 시스템에 적용한 피지컬 AI가 산업생산성 혁신의 핵심 수단으로 부상
 - 생성형 AI는 사무·연구개발·설계 등 지식노동을 보조하고, 피지컬 AI는 제조·물류·건설 등 현장업무를 자동화하면서 산업 전반의 생산성 혁신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
- AI 기반 공정혁신³⁵⁾과 생산체계 고도화를 통해 석유화학·철강 등 전통 주력 산업 생산성을 제고할 필요
 - 연구개발 및 제품 설계 단계에서도 AI 활용을 확대하여 범용 제품 중심의 생산구조를 고기능성·친환경 제품 등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으로 전환
- AI 및 피지컬 AI, 로봇산업을 차세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 신성장동력 확보
 - 글로벌 AI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 제조업 기반과 AI 반도체 경쟁력을 바탕으로 피지컬 AI 및 로봇산업 분야에서 선도적 경쟁우위 확보
 - 피지컬 AI, 산업용 로봇 등 핵심기술에 대한 연구개발과 실증을 확대하여 기술경쟁력 제고
 - AI 반도체, 센서, 로봇부품, 소프트웨어 등 핵심 공급망을 육성하여 국내 AI 산업생태계 구축

34) 정선영 외(2025),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 평가 및 정책적 대응방안, 한국은행

35) 불량 예측, 공정 최적화 등에 있어 AI가 공정 데이터를 분석하고 예측·판단하여 생산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만드는 것

-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반도체·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 등 차세대 성장동력 육성, 기업의 투자여건 조성 및 애로 해소를 위한 “국가 총력 지원체계”를 본격 가동할 계획³⁶⁾
 - AI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 인프라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고, 전력·용수·부지 인허가 등을 신속 지원하여 민간투자를 촉진
 - AI 역량 강화 및 AX 가속화를 통해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제고함으로써 잠재성장률 반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 한편, 혁신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포용적 전환’(Inclusive Transition)을 통해 AI 기반 산업구조 혁신의 지속가능성 제고
 - AI 확산에 따른 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 일시적인 고용조정 등 전환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직무전환 훈련과 재교육, 전직지원 및 고용안전망을 강화하여 신산업으로의 원활한 전환을 지원할 필요
 - 산업전환의 영향을 크게 받는 근로자와 지역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여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36) 관계부처 합동(2026),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IV. 결론 및 시사점

□ 우리 경제의 저성장 기조는 경기순환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잠재성장률 하락에 기인한 구조적 문제

- 경기순환에 따른 일시적인 경기침체는 재정·통화정책 등 거시경제정책을 통해 일정 부분 완화될 수 있으나, 잠재성장률의 하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동, 자본, 생산성 전반에 걸친 경제의 체질 개선이 요구
 - 일본의 아베노믹스도 적극적인 금융·재정정책을 통해 경기·고용개선에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구조개혁의 성과가 제한되며 잠재성장률 제고에는 한계
- 특히,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나 대·중소기업간 생산성의 격차 등 구조적 문제는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초래하여 잠재성장률을 제약하는 한편, 저성장이 다시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심화시키는 자기강화적 악순환을 초래
 - 이에 따라 구조개혁은 노동·자본·총요소생산성 전반의 개선을 목표로 노동·산업·사회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종합적인 접근이 요구

□ 장기적인 안목과 일관된 정책 추진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할 필요

- 최근 반도체 산업의 수출과 투자가 우리 경제성장을 이끌고 있으나, 특정 산업에 대한 높은 의존도는 해당 산업 경기 변동에 대한 경제 전반의 민감도를 높이는 요인
 - 따라서 반도체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지속 강화하는 한편, 신산업 육성과 서비스업 생산성 제고 등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필요
- 이와 관련하여 정부가 첨단전략산업 기금 조성, 전략형 국부펀드 도입 등을 통해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장기인내자본 공급, 민간 투자 촉진을 강화하려는 정책방향은 성장잠재력의 확충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평가
- 다만 산업정책과 구조개혁은 단기간에 성과가 나타나기 어려운 만큼 정책이 정권이나 경기 여건 변화에 관계없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관되게 추진될 필요
 - 특히, 민간의 투자와 혁신은 미래에 대한 기대와 정책의 예측가능성에 크게 영향을 받는 만큼, 정책의 지속성·신뢰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

□ 한편, 구조개혁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포용성에 대한 고려도 필요

- 전 산업으로의 AI 활용 확산은 산업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되나, 양극화를 심화시킬 우려도 상존
 - 특히 기업 규모와 근로자의 숙련도 등에 따라 AI 도입·활용 역량에 차이가 발생하면서 기업간 생산성 격차와 노동시장 내 소득 격차가 확대될 우려
 - BOA는 AI가 향후 10년간 글로벌 성장률을 최대 1%p 끌어올릴 잠재력을 가진 것으로 전망³⁷⁾
 - 다만 최근 미국 비농업부문의 노동소득분배율이 53.8%로 관련통계가 시작된 1947년 이후 최저수준으로 하락하는 등 양극화 우려도 확대³⁸⁾
- 또한 구조개혁에 수반되는 산업·기업의 구조조정과 노동 이동 과정에서 특정 계층에 전환비용이 집중될 우려
 - 영국은 1980년대 민영화와 규제 완화, 노동시장 유연화 등 광범위한 공급측 구조개혁을 추진하여 시장 효율성을 높였으나, 개혁 과정에서 높은 실업 및 소득격차 확대 등 상당한 사회적 비용도 발생³⁹⁾
- 산업혁명 당시 러다이트 운동에서 볼 수 있듯이, 기술혁신의 혜택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전환비용이 특정 계층에 집중될 경우 사회적 갈등과 기술 혁신에 대한 저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
 - 이는 사회적 불안을 초래할 뿐 아니라 혁신의 확산과 구조개혁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우려
- 따라서 산업구조의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직무 전환 지원과 재교육, 사회안전망 강화 등 포용적 정책이 병행될 필요
 - 아울러 혁신의 성과를 경제 전반으로 확산시킴으로써 구조개혁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가 요구

37) BofAGlobal Research (2026), Fortune(2026.5.24.) 재인용

38)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2026), “Productivity and Costs News Release”

39) IMF(1996), “United Kingdom: Recent Economic Developments”

참고문헌

[국문자료]

- 관계부처 합동(2025), “2026년 국민성장펀드 운용방안”
- 관계부처 합동(2026),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 국가데이터처(2023), “장래인구추계:2022~2072년”
- 국회예산정책처(2025), “NABO 인구·고용동향&이슈. 제2호”
- 국회예산정책처(2026), “2025~2072년 NABO 장기재정전망”
- 김민호 외(2024), “혁신기업의 육성과 스케일업: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전략”, KDI
- 대한상의(2026), “주요국 국부펀드 현황 및 시사점”
- 이규용 외(2024), “산업 및 직종별 인력수급전망과 외국인력 수요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이도형 외(2020), “미션 중심 도전적 R&D 프로그램 기획 연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이상무 외(2023),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과 규제환경에 대한 연구”, KDI
- 이은경 외(2024),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과 향후 전망”, 한국은행
- 이재호(2026), “청년세대 노동시장 진입 지연과 주거비 부담의 생애영향 평가”, 한국은행
- 이태규(2020), “한국경제의 역동성 진단: 산업구조변화와 성장의 국제비교”, 한국경제연구원
- 재정경제부(2026), “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 도입방안”
- 정선영 외(2025),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 평가 및 정책적 대응방향”, 한국은행
- 최민철(2024), “혁신정책 전문가 50인에게 묻다: 우리나라 연구개발 정책이 나아갈 방향”, 한국산업연구원
- 한국생산성본부(2025), “노동생산성 국제비교”
- 한국은행(2016), 「금융안정보고서」, 2016년 6월
- 한국은행, 「금융안정상황」, 2018년~2025년
- 황설웅 외(2026), “경제안보 패러다임의 부상과 우리나라 투자의 구조적 전환”, 한국은행

[영문자료]

British business bank, <https://www.british-business-bank.co.uk>

Fortune(2026), “BofA says you’ll be 10x more productive with AI. Ignore the 0.1% result so far”

German Federal Ministry for Economic Affairs and Energy,
<https://www.bundeswirtschaftsministerium.de>

IMF(1996), “United Kingdom: Recent Economic Developments”

IMF(2022), Japan:2022 Article IV Consultation

OECD(2019), “Economic Surveys: Japan 2019”

_____(2020), “Enhancing Training Opportunities in SMEs in Korea”

_____(2022), “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22”

_____(2023), “OECD Reviews of Innovation Policy: Korea(2023)”

_____(2023), “Economic Policy Reforms 2023: Korea”

_____(2024), “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24”

_____(2026), “Financing SMEs and Entrepreneurs 2026”

_____(2026), “Inclusive and Sustainable Well-being in Korea”

_____(2026), “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26”

_____(2026), “OECD Economic Outlook, Volume 2026 Issue 1”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2026), “Productivity and Costs News Release”

U.S.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https://www.sba.gov>